

혁명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1월 30일 (금)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한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지난 IMF 위기 이후 이미 선제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관철시킨 바 있다. 정리해고/비정규직/민영화(사유화)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노동기본권과 노조에 대한 탄압과 억압은 87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부의 양극화는 극단적으로 진행됐다. 반면에 자본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자유(규제완화)를 안겼다. 한미FTA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독점자본(재벌)이 초국적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를 통해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지금의 현실을 낳은 원조다. 이명박정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선 정권과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앞선 정권보다 더욱 폐악한 ‘군주’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진보정당은 자본과 국가가 강제한 노동유연화에 맞서 투쟁하기는 고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본가정당’과 손을 잡고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정권교체를 내세워 노동자계급을 무장해제 시키고 적진 분열 상태로 몰고 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산별노조, 대공장, 공기업 등의 노조 관료지도부도 진보정당과 행태를 같이 했다. 아니 그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인적, 물질 토대로 작용했다. 진보정당과 노조관료로부터 배척당한 대부분의 투쟁은 장기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힘 있는 노조는 투쟁을 회피하고 야권연대, 자본가정당과의 정책협약으로 달려갔다. 이상이 지금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사실상 파산한 이유다.

2008년 경제위기 여파가 아직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상태는 아니다. 한국의 자본은 말한 바와 같이 지난 IMF 위기를 계기로 10여 년에 걸쳐 노동자 민중에게 이미 혹독하게 위기를 전가시킨 덕에 현재의 위기를 얼마간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한몫했다. 총선에 이어 대선정국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확대’ 등이 쟁점으로 등장한 배경도 바로 이제까지의 위기전가가

극심한 데 따른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반발, 투쟁이 끈질기게 벌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선거 시기를 맞아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설령 일부 실행된다 해도 기껏해야 ‘언발에 오줌누기’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저들 자본가정당은 아직도 노동유연화, 고통분담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대 재벌은 벌써부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세계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본과 국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이고 진실이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둔 채, 이런 현실에 눈 감고 말하는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복지확대’는 그야말로 ‘빈 깡통’일 수밖에 없다. 자본과 보수언론은 이 구동성으로 문제제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박근혜에게까지 공세와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근혜가 그나마 ‘경제민주화’를 현격히 후퇴시킨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야권연대/정권교체는 자본가(계급)의 대표 선수를 바꾸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는 물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등장한 모든 자본주의 위기는 그 본질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낳은 위기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실은 그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자본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순 경제적)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위기를 폭력적으로 해소/해결해왔을 뿐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국가 간, 지역 간, 진영 간 전쟁은 물론이고, 파시즘의 출현도 그러하며,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 대해 벌이는 계급전쟁, 즉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 복지/임금삭감, 긴축정책, 고통전가 등이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보다시피 지금 신자유주의 실패/파산을 맞아 자본과 노

동 사이의 계급전쟁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와 함께 자본과 자본,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사이의 대립과 경쟁이 날로 심화/증폭되고 있다. 유로존이 겪고 있는 위기는 유로존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로존의 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이며, 유로존의 위기는 또 다시 세계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도 여전히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 이른바 ‘재정 절벽’을 막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칠 내외적 파장은 기승하리조차 어렵다. 일본은 아예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미 실패/파탄난 신자유주의를 계속할 수도, 신자유주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 전의 (이른바 복지자본주의)위기가 신자유주의를 불렀기 때문이다. 복지자본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한마디로 지금 자본주의는 고장 난 상태로 멈춰있다. 그냥 멈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과 억압을 가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전 인류를 파괴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안도, 미래도 없다. 자본주의는 이제 그 역사적 생명을 다했다.

이제 전 세계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반대/철폐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자체가 그것을 강제하고 있다. 흑자는 말한다.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상태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반대/철폐를 정면에 내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시작을 해야 한다. 바로 이번 ‘선투본’이 그 시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 반대/철폐’가 운동과 투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과정으로서의 전술이 아니라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시도해야 하는 역사적 상황이 도래했다. **혁명**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자본주의 반대/철폐는 순 경제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없다.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서는 자본가권력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즉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급 사회에서 권력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배타적(일방적)으로 지배/통치하는 힘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나의 문제가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부르주아 정치체제는 선거/의회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르주아 정치권력은 선거/의회를 통해 형성되지 않는다. 선거/의회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실제 권력은 국가폭력(공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곧 국가권력이다. 여기서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3권(입법/사법/행정)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3권의 성립과 분리에 앞서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국가권력이 먼저 들어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부르주아 혁명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오늘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3권(분립)의 행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파생/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의 요체는 곧 행정권력이다. 거의 모든 실질(직접)적인 폭력 기제는 행정부 산하에 있다. 행정부와 국가는 때때로 분리되지 않는다. 대통령제 아래에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한 정파(정당)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한 정파(정당)의 힘

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때문에 국가권력 자체가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 의회/선거가 아무리 요란을 떨고 심지어 ‘선거혁명’이라는 말이 난무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요식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글로벌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이는 변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도 당연히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통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어야만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 있다. 노동자권력

또한 자본가계급에 대한 배타적(일방적) 지배/통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계급사회에서 권력은 그 본질에서 독재다. 정서적/경험적으로 독재라는 말이 아무리 거슬리고 거부감이 들더라도 독재의 존재/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곧 부르주아 독재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를 가리는 구실을 한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진전/발달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독재가 가능한 데까지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순간 국가폭력은 가차 없이 작동한다. 이로부터 예외인 부르주아 국가는 없다. 노동자(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곧 노동자 독재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결코 노동자 독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다수자에 의한, 다수자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민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 독재가 여전한 것은 자본가계급의 존립을 강제되도록 되풀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량주의는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의회(를 통한) 사회주의는 형용모순이다. 선거/의회주의를 따르며 사회주의의 이상과 정신을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선거/의회를 통해 집권을 한 후에 사회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공상이다.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물론 사민주의를 입장으로 갖는 것은 그들의 선택(자유)이며 이는 별개의 문제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곧 부르주아 정치체제 자체를 부정/파괴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은 부르주아 정치체제 위에서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권력의 형성 과정과 행사가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작동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본

가는 선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비밀(핵심)이다.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소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가의 탐욕과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며, 특히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데 전술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소수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 장악이 문제다. 그에 반해 노동자권력은 오직 직접 선출된 자에 의해서만, 선출된 자에 대한 항상적/즉각적 소환이 보장된 상태, 선출된 자의 특권이 배제된 상태 아래에서만 성립/행사된다.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맥락)에서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형성할 수도 행사할 수도 없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에 대한 개입과 진출, 부르주아 정치체제가 낳은 공간을 활용한 투쟁과는 엄연하고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오직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 될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런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성과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전술은 구체적 정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선투본’이 말하는 “노동자대통령”은 노동자권력에 대한 은유적/잠정적 표현/개념이다.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 운동’이 아니라 ‘대선 투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역시 “대선투쟁강령”도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말하는 ‘공약’과는 전혀 다르다.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사업장이 자신의 강령을 내걸고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직접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존 부르주아 정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도 다르지 않지만 노동자를 유권자로 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선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보다 의회/선거/대리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권연대/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자직접정치”를 말하는 것도 부르주아 정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좀 더 강화하지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노동자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그 차원에서 바로 “정리하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 몰수 사회화(국유화)”, “세상을 뒤엎는다” 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란 바로 노동자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말한 그것과는 사실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그들의 경우 단지 부르주아 정치체제로의 진출/편입을 목적인 것이며 정치세력화란 그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반이명박근혜, 야권연대, 정권교체에 목을 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반대와 자본주의 반대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야권연대/정권교체를 위해 스스로 사퇴한 것도, 노회찬이 김소연/김순자 후보도 의미가 있지만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이 받아주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도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그들이 개량/의회/선거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역명**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정치적 구심을 세워내자!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을 치자!

목숨을 건 철탑농성,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선 ‘진보적 정권교체’를 외치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몰이를 하고 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결연한 투쟁들에 연대하기 위해 정리하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조탄압 분쇄를 외치며 포위의 날과 범국민대회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국적 투쟁전선은 여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 지지몰이에 맞선 전국적 투쟁전선의 형성

총연맹이 전선을 쳐주지 않아서인가?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민주당 표 찍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노동자투쟁의 구심이 되어주기를 누가 진지하게 바랄 것인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부르주아 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이 현안투쟁의 ‘해결책’인 양 조합원들을 몰아가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의 불씨를 지피고자 온 몸을 던져 철탑에 오른 이 투쟁들마저도 그래서 정권교체에 복무하고 정권교체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것인가?

희망은 가진 자들 간의 권력 이동에 불과한 허구적인 정권교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모아내서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자본독재에 대항하는 계급적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다. 현

대차 비정규직투쟁, 쌍차투쟁, 유성투쟁, 재능·코오롱 투쟁 사업장 공동투쟁은 모두가 더 이상 단사의 현안투쟁을 넘어 그 자체로 각각 계급적 연대투쟁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대선 정세는 이 투쟁들에 위기(원심력)와 기회(구심력)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계급적 연대전선에 벗어나 각자 ‘내 문제 해결’로 빠져나가도록 부추기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적 전선을 칠 투쟁의 정치적 구심을 세워야 할 필요를 강력히 제기하기도 한다. 어느 쪽을 부여잡을 것인가?

대선 정세에서 단사 문제로 빠져나갈 것인가

‘내 문제 해결’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치권에 기대고 야권 대선후보들에 활용 당하고,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지지몰이에 복무하는 길이다. 정치권에 의한 국정조사로 쌍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쌍차 문제는 이미 단사의 문제가 아니다. 정리하고 철폐투쟁으로 확대될 때만이, 계급적·사회적 연대투쟁으로 확장될 때만이 해고자 복직도 쟁취할 수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또한 마찬가지다. 야권 대선 후보를 활용하여 현대차 사측을 압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야권 대선후보에 의해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이 정치적으로 활용 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안철수나 문재인이 부각되게 하는 것은 정권교체 지지몰이에 객관적으로 일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몽구를 압박해서 ‘내 문제 해결’에 당장 도움 된다면 전국 전선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투쟁들이 현 대선 정세에서 이러한 원심력을 끌어내고 계급적·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야권연대를 통한 민주당 정권교체 지지몰이에 대항할 자신의 정치적 구심을 가져야 한다. 품앗이 연대를 넘어 단일한 전선을 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야권연대에 맞서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 후보 투쟁에 대해 집단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것은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내 문제’가 전국적 투쟁전선 형성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비지회 투쟁 일각에서 ‘후보 등록할 3억원이 있으면 투쟁기금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현 시기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의 정세적 중요성에 눈을 감는 단사주의적 태도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회 간부들의 그러한 지지 선언은 특히 유의미하다.

노동자대통령 후보투쟁 - 계급적 연대투쟁의 정치적 구심으로 서야 한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맞선 노동자대통령 후보 투쟁은 노동자의 직접정치라는 일반적 과제만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비롯한 정세적으로 관건적인 투쟁들을 단일한 전국 전선으로 묶는 정치적 구심으로, 대안 정세구심으로서의 과제를 안고 나섰다. 현재 노동자계급 정당이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자대통령 후보 투쟁이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정세적으로 계급정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정권교체 지지몰이에 맞서 노동자계급 독자후보 투쟁을 중심으로 대안 정세구심을 세워내고,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를 위한 강력한 전국투쟁전선을 치자. **역명**